

광주시, 관급자재 구입 지역 제조업체 확대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광주시가 관급자재 구입을 하는 과정에 지역 제조업체를 확대하고, 공사와 물품 발주방식이 기존 없이 ‘들쭉날쭉’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억원 이상 조달청 3자단이 계약은 지역업체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제도가 있음에도 이를 활용하지 않거나 배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광주시가 오히려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2일 광주시의회 조오섭(새정치·북구 2)의원이

광주시로부터 받은 1000만원 이상 관급자재 구입 현황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최근 4년간 관급자재 계약 금액과 업체 수를 보면 광주 업체가 378억3000만원(43%·330건)으로 타 지역업체 491억6000만원(57%·269건)에 비해 뒤졌다.

업체수로는 올해 광주지역 업체 계약건수가 60건(48%)으로 타지역 66건(52%)을 넘지 못했다.

업종별로는 토목과 건축이 다른 지역에 치우쳤다. 토목의 경우 광주 32건(41%), 다른 지역 47건(60%), 건축의 경우 광주 68건(45%), 다른 지역 82

건(55%) 등이었다.

특히 1억원 미만의 조달청 3자단이 계약 발주 398개 중 231개(58%)만 광주지역 업체와 수의계약했고 167개(42%)는 다른 지역 업체와 수의계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1억 이상 조달청 3자단이 계약은 지역업체 가산점을 주는 제도가 있지만 활용하지 않거나 배제된 경우도 있었다고 조 의원은 지적했다.

조 의원은 “광주시가 발주하는 모든 공사와 물품은 설계때부터의 담당자와 발주때의 담당자에 의해 그때그때 다르다”면서 “이는 광주시가 그동안의

관례에서 벗어나지 못함으로써 지역 제조업체 계약제와 등으로 인해 지역발전에도 저해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발주할 수 있는 여러가지 방법을 담당자의 주관적 판단이 아닌 객관적 판단으로 모두가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설계심의 및 발주심의를 개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 관계자는 “광주지역 제조업 업체가 취약해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면서 “지역업체가 우선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해명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전남도, 보건소 이용 매년 급감 … 대책 원가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전남지역 보건소와 보건지소 등 공공보건기관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매년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도가 외부의 아이디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전남도, 보건소·지소 이용자 감소 추세=전남도가 12일 도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따르면 올 들어 9월 말까지 도내 보건소·의료원(22곳), 보건지소(215곳), 보건진료소(328곳)를 이용한 환자는 총 121만8000여명이다. 2013년 174

만9000여명, 2012년 196만1000여명과 비교해 감소세다.

올해 10~12월 보건소·의료원, 보건지소를 이용하는 환자를 포함하더라도 총 환자 수는 지난해에 못 미칠 것으로 전남도는 예측했다.

보건지소 기준 진료분야별 환자 수는 일반의과 2012년 47만6000여명→2013년 46만8000여명→2014년 31만6000여명, 한방 2012년 14만1000여명→2013년 12만7000여명→2014년 10만5000여명, 물리치료 5만1000여명→2013년 4만2000여명→2014년 2만8000여명으로 각각 줄었다. 치과도 2012

년 3만6000여명→2013년 2만3000여명→2014년 1만4000여명으로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다.

공공보건기관을 이용하는 환자 수가 이처럼 줄어드는 것은 농어촌인구가 줄어드는 데다 환자들이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와 비교해 의료시설이 잘 갖춰진 일반 병·의원을 선호하기 때문으로 전남도는 분석했다.

◇우승희 도의원, “외부 아이디어 활용도 낮아”=전남도가 참신한 외부 아이디어를 수혈받는데는 취지로 도입한 민원메신저와 생활공감정책모니터 제도도 활용도가 낮은 것으로 지적됐다.

우승희 전남도의원은 12일 행정사무감사 보도 자료를 통해 “도민소통실이 운영하는 민원메신저의 69%와 생활공감정책모니터단의 94%가 최근 1년간 단 한 건의 의견도 제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우 의원은 “민원메신저 전체 150명의 31%인 47명이 116건의 의견을 제시했고, 모니터단 전체 249명의 6%인 16명이 29건의 의견을 제시했다”며 “민원메신저와 모니터단에 중복으로 위촉된 20명 중 11명이 의견을 한 번도 제시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이낙연지사 공약 이행

17조 8000억 든다

민선 6기 이낙연 전남지사의 공약 사업을 이행하는데 모두 17조8089억원 가량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분석됐다. 가장 많은 예산을 들어가는 사업은 섬·갯벌 등 관광명소 조성으로 모두 5034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수산업의 저비용고소득 구조 개편(3727억원), 광양제철~여수산단 해저터널 구축 지원(1600억원)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전남도가 도의회에 제출한 ‘민선 6기 도지사 공약 사항 실천계획’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이 지사의 공약은 7개 분야 76개 사업이다. 이 가운데 7조988억원이 이미 투자됐으며 임기 내 투입할 예산은 7조3719억원, 임기후 예산은 3조4272억원으로 분류됐다.

이 지사 공약사업은 튼튼한 지역경제 기반구축 11개 사업, 농축어업의 국제경쟁력 확보 7개, 동북아 관광문화의 거점 조성 12개, 균형있는 지역개발 촉진 10개, 쾌적한 환경의 보전관리 6개, 생산적 도민복지 실현 10개, 도민과 함께하는 열린 도정 구현 10개 사업 등이다.

내용별로는 예산사업이 55건, 비예산사업이 21건이었으며 임기내 이행 가능한 사업은 47건, 임기후는 27건으로 나타났다. 또 전체 공약 76개 중 신규사업은 39건, 기존사업은 30건, 신규와 기존사업이 가미된 사업이 7건이었다. /윤현석기자 chadol@



추위에도... 위안부 수요집회

12일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수요집회에서 김복동(왼쪽)·김원옥 할머니가 두꺼운 복장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월드컵경기장 주차장

롯데쇼핑에 특혜 의혹

광주시가 롯데쇼핑과 맺은 광주 월드컵경기장 주차장 사용협약에 특혜의혹이 제기됐다.

광주시의회 임택(새정치·동구 1)의원은 12일 체육U대회지원공과 안전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주차장 사용협약에 각종 의혹이 난무하다”면서 “부적절한 협약으로 세외수입 등의 재정적 손실을 가져오고 있어 재협약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에 따르면 월드컵경기장 주차장 사용협약이 계약기간 중간에 재계약이 이뤄지면서 지난 2011년 6월30일 1차로 사용면수 934면에서 지난 2012년12월17일 2차 협약에서 1691면으로, 사용기간은 4년에서 14년으로, 사용료는 10억원에서 30억원으로 각각 변경됐다.

문제는 1차협약의 1명당 연간 사용료는 26만7666원인 반면 2차 협약의 1명당 연간 사용료는 12만6721원에 불과했다. 임 의원은 “1차 협약 기준으로 하면 2차 협약의 사용료는 오히려 63억원을 받아야 하는데, 오히려 절반이 낮아진 것으로 이는 광주시가 손해를 보면서 롯데쇼핑에 특혜를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2차 협약 당시 사용료로 60억원을 제시했으나 주차장을 롯데쇼핑 전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협약전과 동일하게 누구나 이용하게 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월드컵경기장에서 개최되는 각종 체육 및 문화행사 시 주차장을 공용으로 개방해야 한다는 점 등을 감안, 2011년 이미 납부한 사용료 10억과 합해 총 40억원으로 사용협약을 체결했다”고 해명했다. /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누리과정 등 복지예산

중앙정부가 책임져라”

전남도의회 교육위 촉구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김탁 의원)는 12일 “중앙 정부는 지방교육재정 파탄을 초래하는 누리과정, 초등돌봄교실 지원 등 대안공약 교육복지 예산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근혜 정부는 대선 공약으로 고교무상교육, 학급당 학생수 감축, 누리과정지원, 초등돌봄교실 지원, 대학 반값 등록금 등을 제시한 바 있다.

교육위는 이날 성명서에서 “대통령의 공약 사업으로 당연히 중앙정부에서 지원해야 할 몫임에도 내년도 누리과정 사업 추진을 위한 별도의 국고지원 예산 반영 없이 지방재정교부금으로 충당하라고 한다”며 “이로 인해 교원명예퇴직 수당이 삭감돼 신규교사의 채용이 늦춰지고,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감지 못한 지방채 규모 또한 3조원에 육박해 당장 학교 운영에 필요한 학교운영비를 삭감해야 하는 상황이 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전남도교육청은 2015년도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포함한 누리과정 예산 1374억원 가운데 어린이집 예산 474억원을 예산 부족으로 편성하지 못했다. /윤현석기자 chadol@



자연과 인간의 아름다운 동행

제 11회 군산 세계철새축제

2014.11.14 Fri - 16 Sun 금강습지생태공원/철새조망대

Program

철새체험프로그램 영농체험프로그램

탐조프로그램 특별프로그램



반드시 사전예약 해주세요!!

금강호 철새그림그리기대회·철새와 함께하는 매직교실

·접수기간: 2014. 10. 12 ~ 11. 13 ·접수방법: 축제홈페이지 www.gmbb.kr

주최 군산시

주관 군산세계철새축제위원회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mev 원경부

전라북도

